

3월 1일 우익 총동원에 맞서 거리를 지키자

제18차 범국민행동의 날, 2017년 3월 1일 오후 5시 광화문광장



우익 총공세와
퇴진 운동의 과제

3면

2016년
노동자 투쟁 평가와
2017년 전망

6~7, 12면

김정남
피살과
스탈린주의

2, 10~11면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건설노동자들

8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미국 지배자들이
트럼프에게 등을 돌렸나?

7면

정희진 씨의
〈더러운 잠〉
감상법

5면

광고
3·8 여성의 날 맞이
여성해방 하루 학교

5면

김정남 피살

정세현 발언 파문과, 우익의 호들갑과 위선

김영익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김정남 피살 사건에 여러 북한인들이 연루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중에는 북한 외교관, 고려항공 직원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김정남 독살에는 신경성 독가스인 'VX'가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사건 정황과 독가스 종류 등을 감안하면, 국가기관 정도가 관여하지 않고선 실행되기 어려운 사건으로 보인다. 김정은 정권이 피살의 배후일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북한 당국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 강철은 죽은 사람이 "(김정남이 아니라) 김철입니다. 여권 이름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2월 23일 북한은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빌려 이번 사건이 '남한이 짜놓은 각본에 따른 사건'이라고 했다.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선, 북한 측 담화를 보면 어느 대목에선 말레이시아에서 사망한 "공화국 공민"의 사인이 돌연한 "심장 쇼크"여서 말레이시아의 부검이 필요했다고 하다가, 다른 대목에선 "명백히 남조선 당국이 이번 사건을 이미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으며 그 대본까지 미리 짜놓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검할 필요가 없는 쇼크사'와 '남한의 사전 각본에 의한 희생'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 누구[남한]의 조종에 따라" 수사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말레이시아는 오랫동안 비동맹 노선을 걸어 온 국가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 위기 당시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라는 미국의 압력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리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대로, "우리[남한]보다 북한이 말레이시아와 [더] 가깝다."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북한 측 담화가 "상호 무비자 여행이 가능할 만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한 북한과 말레이시아의 관계를 크게 훼손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당국의 담화는 김정남 피살에 김정은 정권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만 더 키워 주고 있다.

정세현 발언

남한 우익은 이 사건을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 지형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데 이용하고 싶어 안달이다.

2월 15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은 김정남 피살 사건을 안보 불안과 연결시켰다. "정치권에서도 정말 안보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안보에 관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 통일부는 김정남 피살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더 부각시킬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미국이 북한을 곧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익은 더 나아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맹비난했다.



국가기관이 아니고선 구하기 힘든 독가스로 피살된 김정남.



남북의 두 세습 권력자들 박근혜의 위기는 김정은에게 과연 희소식이었을까?

문재인 캠프의 대선자문단 위원장인 정세현은 오마이TV <장윤선의 팟짱>에 출연해 김정은이 김정남을 제거한 것은 "권력의 속성"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승만·박정희 정권이 정적들을 많이 제거했음을 상기시키며, 그런 역사가 있는 남한이 북한을 비난만 할 처지는 아니라고 옳은 지적을 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익은 일제히 이 발언을 몰고 늘어졌다. 북한과 남한을 어떻게 같은 반열에 올려 놓을 수 있느냐며, 정세현 전 장관의 안보관이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평소 정세현 전 장관이 사드 배치에 반대해 온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물론 이는 문재인을 겨냥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바로 꼬리를 내렸다. 정세현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그와 선을 그은 것이다. '더러운 잡' 논란에 이어 문재인은 이번에도 비겁하게 우익의 공세에 뒤로 물러섰다.

정세현 전 장관이 틀린 말을 한 건 아니다. 남한의 역대 권위주의 정권들도 자신의 정적을 암살하거나 처형했다. 이승만은 (안두희를 내세워) 김구를 암살하고, 조봉암을 처형했다. 박정희도 자신의 총복에서 정적으로 변한 김형욱을 프랑스에서 납치해 죽였

다는 합리적 의혹을 받았다. 박정희가 1973년 일본에서 김대중을 납치해 살해하려 한 사건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야비하고 폭력적으로 정치적 경쟁자를 제거하려 하는 건 남북의 권위주의 정권들이 공유한 속성이었던 것이다.

박정희의 후계자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밀어 올렸던 우익이 김정남 피살을 놓고 김정은을 비난하고 인권 운운하는 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다. 적반하장은 남북 지배자들의 공통된 속성인가.

"싸우는 형제들"

남과 북의 정권들이 정적을 제거한 역사는 단지 각 독재자들의 개성이나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1980~90년대 일부 진보적 학자들은 냉전 하의 남북관계를 연구해, 남북이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서로 닮은 꼴을 형성해 왔음을 지적했다. 남북의 두 국가들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적대하면서도 국가 형태나 통치 행위에서 비슷한 면이 많았던 것이다. 예컨대 1970년대 세계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남한 박정희 정권은 1972년 유신 헌법을 밀어붙였는데, 그때 김일성 정권도 주석제를 도입하는 개헌을 단행했다. 남북 모두 비슷한 시기에 위기를

맞아 똑같이 1인 독재 강화로 대응했던 것이다.

이런 경험은 남북 양 체제의 본질적 성격이 같은 것과 관련이 있다. 양측 모두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고 경쟁하면서, 그 경쟁에서 승리하려고 똑같이 한 정당이 국가 권력을 모두 틀어쥐 채 국가자본주의적 발전을 추동했다. 그 체제를 유지하려고 남북 지배자들은 공히 반대자를 탄압하고 노동계급을 엄청나게 착취했다. 남북 권력자들은 마르크스의 말마따나 "서로 싸우는 형제들"인 것이다(적대적 공존 관계). 그리고 이 점은 남한의 국가 형태가 권위주의에서 벗어난 오늘날에도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남북 지배자들이 "서로 싸우는 형제들"이라는 점은 김정남 피살 사건의 맥락을 이해하는 또 다른 실마리를 제공

해 준다. 독재자 아버지의 후광에 기대어 권력을 잡은 박근혜가 정권 퇴진 운동으로 탄핵될 지경이 된 것을 보며, 같은 세습 권력자인 김정은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가뜩이나 트럼프 정부의 등장으로 대외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 관료 체제의 내부를 점검하고 자칫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촉발할 만한 관료 내 분열 요소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까?

북한은 지난해 12월 남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초급당위원장대회를 열어 당 기초 조직 책임자들을 불러 모았다. 거기서 김정은은 "패배주의, 우는 소리를 하며 자기 앞에 맡겨진 과업을 제대로 수행 못하는 초급당조직들"을 질책하고 단속했다. 이런 게 단지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추천 소책자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59쪽, 3,000원



북한은 어떤 사회인가?
— 북한 체제에 대한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비판
김하영 지음, 노동자연대, 92쪽, 3,500원

wspaper.org

★ 지하철 안산선 외주화 중단하라

★ 1백22개 단체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나중 말고 지금!"

★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⑥

성 해방 가능성을 보여 준 혁명 러시아

★ 세월호 인양 후 충분한 선체 조사와 보존 보장하라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우익의 발악에 맞서 총력 동원하자

김문성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 심리의 최종변론일을 2월 27일로 정했다.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가 7인 체제로 축소되는 3월 13일 전에 평결을 하겠다는 뜻이다.

적어도 탄핵 평결 시점에 관한 한, 조기 탄핵을 촉구한 퇴진 운동의 압력이 먹힌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도 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박근혜 일당은 3월 13일 이후로 평결을 늦춰 보려고 줄기차게 지연 책략을 부렸다. 증인 대거 신청, 불공정 심리 비난, 부실 변론 등.

탄핵 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와 우익이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들이 도발하면 그 반작용으로 우리 편 대응도 격양됐다. 삼성 이재용 구속 문제가 그랬다.

특검 연장

최근 우익은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의 말을 꼬투리 삼아 색깔론으로 야당의 기를 죽이고 우익을 결집시키는 소재로 쓰려 한다. 정세현은 북한 김정남 피살 사건이 북한 정권의 소행이라면, 한국도 비난만 할 처지는 아니라고 했다. 이승만과 박정희 등의 정적 살해 역사를 보면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도 문제인은 ‘더러운 잠’ 논란에 이어 또다시 사과를 하며 꼬리를 내렸다. 대통령이 떼어 놓은 당상이나 된 것인 양 전형적인 ‘부자 몸조심’ 행보다.

한편,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중요 쟁점이 됐다. 2월 28일로 만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고 3월 10일 전후로 탄핵 인용(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되면 박근혜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이 불발됐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대선용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연장 승인 권한을 가진 황교안도 연장에 부정적이다.

탄핵

대선용 공세라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봐야 3월 안에 수사가 끝난다. 지금 수사가 끝나도 현재 구속 기소된 거물급 재판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어차피 우익이 불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 연장에 격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우익도 박근혜가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우익의 공세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우병우는 구속을 피하려고 자기 혐의를 대부분 박근혜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고, 김영재는 자기가 청와대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박근혜 변호인 김평우의 말대로면, 박근혜의 뇌물죄 혐의는 “종신행” 감이다!

2월 22일 현재 심판의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막말소를 하며 불복을 암시한 것도 이런 일들 때문일 것이다. 기본적인 도덕성이 파탄 나 더는 사실과 논리로 재판부나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그저 지지층 결집과 동원을



레드카드 박근혜의 죄는 종신행 감이다.

위해 현재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 범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판결 전 ‘자진 하야설’이 나왔던 맥락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진 하야설’의 음험하고 더러운 시나리오는 이렇다. 특검 연장을 무산시켜 일단 구속수사 위험을 막는다. 탄핵 판결 전에 자진 하야 선언을 해 탄핵심판도 각하시킨다. 탄핵 인용(대통령직 파면), 구속과 특권 박탈의 위험을 일단 피한 뒤에 불구속 수사나 차후 사면

등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다. 이 꿈을 성공시키기 위해 박근혜가 직접 지지층을 동원하며 우익적 압박을 극대화한다.

협박

박근혜가 스스로 탄핵 가능성을 인정하는 책략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적어도 박근혜 일당이 “내란” 운운하는 것이 단순 막말이 아니라 필사적인 협박을 담은 책략임은 진실일 것

이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던 박근혜의 실체다. 틈만 나면 법과 원칙, 애국과 희생을 국민에게 요구하던 국가 원수의 실체다.

지금은 다섯 달째 이어지는 퇴진 운동이 마침내 그 첫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이다. 박근혜 일당의 뇌물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블랙리스트 통치 등 부패하고 우익적인 그 정부 자체를 종식시켜야 한다.

박근혜 변호인의 히스테리는 박근혜의 초조함을 보여 준다

2월 22일 현재 심리에서 박근혜 측 대리인 김평우는 “악한 … 여자 하나”를 괴롭히는 것이 탄핵이라고 했다. 자신의 최근 책 《탄핵을 탄핵한다》에서는 박근혜가 임기 말 외톨이라 괴롭힘을 당한다고도 썼다.

“악한 여자” 프레임은 기가 차 말이 안 나오게 만드는 쟁점 물타기일 뿐이다. 박근혜가 외톨이인 게 국민 탓도 아니고, 정치적 민주주의라면 잘못된 대통령을 국민이 감싸 줘야 할 이유도 없다. 박근혜는 부패한 통치자로 대중의 증오를 사서 쫓겨날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특히, 유독 세월호 쟁점에서만 여성 대통령임이 강조되는 것도 의문스럽다. 김평우는 세월호 참사가 탄핵 소추 사유가 된 것도 비난했다. 세월호 구조 방기가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것에 대해 “여자 대통령한테 10분 단위로 보고해, 이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세월호 비극을 이토록 뻔뻔하고 무책임하게 다루는 자들이 현재 재판관에게 “악자를 생각하는 게 [법관의] 정도”라고 한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다. 악자를 생각한다는 자비로운 자들이



“내란”, “서울 아스팔트 피와 눈물로 덮어 버려” 같은 협박성 말을 그렇게 스스로없이 한단 말인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한국 현대사를 봐도 우익은 매우 폭력적이다. 그리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의 정체 시절 국가의 폭력성은 절정에 달했다. 사실 우익은 진작부터 “계엄령” 운운하며 퇴진 운동 진압을 촉구해 왔다. 물론 지금 박근혜 처지에서 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나 여론을 돌릴 방도도 없고 초조해진 우익 일부가 가짜 뉴스와 악선동, 백색 테러 위협 등에 의존하는 것이다.

박근혜의 공범답게 특검 연장 승인 않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연장 승인 권한을 진 황교안이 특검 연장 승인을 미루고 있다.

보수 쪽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황교안은 박근혜 구속을 바라지 않는 자기 지지층을 의식할 것이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도 당론으로 특검 연장 반대를 정해 황교안의 뒤를 받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특검 연장을 끝내 거부

해 범죄 은폐에 노골적으로 협조한다면 그 스스로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그에게는 당장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다. 그러나 그가 박근혜 임기 내내 박근혜 적폐 내각의 핵심 인물이었던 점을 잊어서 안 된다.

새누리당과 황교안은 당장의 대중

적 못매를 맞더라도 특검 연장을 거부해 현재의 탄핵 반대층을 기반 삼아 훗날을 도모할 심산일지 모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차차기 대선까지 보면서 차기 정부가 실패하기를 기다릴 계획인 것이다.

황교안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계속 이끌면서 꽃길은 꿈꾸게 놔둬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 입으로만 특검 연장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우병우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를 보장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 내려면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물론 운동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수사가 다시 검찰로 넘어가도 박근혜 일당의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박근혜를 사실상 주범으로 한 공소장을 제시했듯이 말이다.

특검 초기 박영수 특검이 인정했듯이, 검사 20명으로 끌고 가는 특검보다 그 1백 배 인력을 갖추고 시간과 돈의 압박 없이 수사를 벌일 수 있는 검찰의

‘하드웨어’가 훨씬 유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특검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고 특검 연장이 세력 간 대결 쟁점이 돼 특검 연장 무산은 우리 편의 길이 빠지는 일인 데다가 수사 결과를 검찰로 이첩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듯하다. 황교안 압박이 안 되면 국회에서 특검법 자체를 개정해 수사 기간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 점에서 야당들이 합의한 개정안 자체도 약하다. 50일 연장으로는 부족하다. 부패가 워낙 광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쉽게 국회 처리 무

산을 인정한 것은 특검 연장과 박근혜 구속이 만에 하나 보수층 결집 역풍을 불러 자신들이 대선에서 불리할까 봐서인 듯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 경쟁자 중 하나인 황교안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에서 그치려 하는 듯이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국회의장 정세균이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세균은 지난해 11월 현재의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는 당시 이를 거부하려는 여당에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사실 박근혜를 겨냥한 특검인데, 애초에 그 법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을 대통령에 넘겨 준 것부터가 문제였다.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철회 투쟁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배우는 게 부끄러워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문명고(경북 경산 소재)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연구학교 반대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연구학교로 지정된 2월 20일부터 나흘째 집회가 계속되고 있으며(24일 현재) 연구학교 지정이 철회될 때까지 집회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인근의 문명중, 경산고 학생들도 동참하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서명 운동에는 1만 3천 명 넘게 참가했다.

사실 교육부의 연구학교 지정은 참패했다. 2013년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교과서가 군인 자녀들의 학교인 한민고에서만 채택돼 완패한 데 이은 2연패다. 이는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여파다.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적폐였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가 대중적 반대에 부딪히자 꿈을 부렸다. 2017년에는 희망학교에 한해 연구학교로 지정하고 2018년부터 국정과 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겠다는 것이었다.

교육부가 2월 10일까지 연구학교 신청을 받았으나 어디서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자 15일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 보수교육감 지역이면서 박근혜 정권의 지역 기반인 경북에서 세 학교가 신청했다. 그러나 영주 경북항공고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신청했다가 심의에서 탈락했다. 구미 오상고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로 신청을 철회했다. 경산 문명고가 유일하게 연구학교로 지정됐다.

문명고는 14일에 학운위를 개최했는데, 처음에는 2 대 7로 반대 의견이 많았다. 그런데 교장이 장시간 학운위원들을 설득해 최종 5 대 4로 통과했다.



“국정교과서 거부한다” 문명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정의로운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

재학생, 신입생 학부모들이 다음 날부터 학교에 모이기 시작해 교장에게 철회를 요구했다. 17일에는 학생·학부모 2백50여 명이 운동장에 모여 지정 철회를 위한 1차 집회를 했다.

분노

이때 교문 밖에는 박사모 회원들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집회를 했다. 현 문명고 이사장 홍택정은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자다. 문명고 교장도 우익적 인물이다. 그는 “국정교과서를 마치 불온서적인 것처럼 말하며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행 의지를 밝혔다. “학생들은 좌파,

빨갱이들 선동에 휘말려 본질도 모른 채 자습하기 싫어서 집회를 한다”고 망언을 하기도 했다.

‘문명고 국정교과서 지정철회 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연성 학생은 이렇게 말했다.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았습니 다. 저희 들은 언론을 통해서 뒤늦게 알았습니 다. 교육부가 지정하는 교과서로 역사를 배운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무엇보다 연구학교에 반대하는 선생님들이 보직에서 해임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분노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은 ‘오늘 [23일] 전국에

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선택했으니 자랑스럽게 생각하라’고 했는데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인용하며 ‘연구학교로 지정되었으니 받아들이고 이제부터는 공부만 하라’고 말했죠. 그러나 정작 공부를 못하게 한 주범은 누구입니까? 국정교과서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학교 자체를 혼란스럽게 만든 교장 선생님 아닐까요?”

23일 문명고 교장은 강당에 학생들을 모아놓고 연구학교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10분 동안 이야기 하고 꿈무늬 빼듯 도망갔다.

학생들의 생각도 변하고 있다. 정연성 학생의 말이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학생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불의에 맞서 저항하는 민주시민으로 소양을 쌓아가는 계기가 된 거죠. 박근혜 정부의 텃밭이자 보수의 아성인 대구, 경북에서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문명고 교사들도 국정교과서 반대 투쟁에 적극적이다. 최재영 교사는 연구학교 신청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최근 침묵하던 연구학교 담당 역사교사가 연구학교 거부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국정교과서로 가르친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부끄러운 상황이라 당당히 거부 선언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학교 측은 인근 문명중학교의 기간제 역사 교사를 데려다 관련 업무를 맡기려 한다.

기간제 교사의 열악한 조건을 악용하는 아비한 짓이다.

최재영 교사는 “학부모들 일부에서는 입학식 때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자퇴와 전학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도 한다.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은 철회돼야 마땅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

김현옥(전교조 조합원, 역사 교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문명고 학생회의 아고라 서명 링크: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99458>

노동조합이 민주당 경선에 참가해야 할까?

최근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모집이 시작되자 민주노총 간부들의 일부도 노조가 민주당 경선에 참가하자고 주장한다. 적잖은 현장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민주당 경선에 관심이 꽤 있다.

지긋지긋한 우파 정부 9년을 끝내고 정권을 교체하고 싶은 열망이 큰 데다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덕분에 민주당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주당 경선 승리자가 본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듯하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완전국민경선제 형식이라서 비당원도 제약 없이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사회연대노동포럼이 경선 참가를 주장한다. 이들은 문재인을 지지한다. 한국노총 금융노조도 조직적으로 경선에 참가하자며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 경선에 관심을 보이는 노동자들 중에는 문재인보다 왼쪽에 있는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

이재명은 보수적인 당론과 종종 충돌한다. 특히, 민주당이 박근혜 탄핵에 대한 현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견해인 반면, 이재명은 현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이에 불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실 벌써부터 우경화하는 문재인보다 대중의 퇴진 염원 정서를 더 속 시원하게 대변하는 이재명이 민주당 후보가 된다면 전반적인 대선 이데올로기 지형이 좀 더 왼쪽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민주당 경선에까지 참가하는 것은 몇 가지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 당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 다지만, 선거인단에 참가하면 범민주당 연결망에 포함되게 된다. 이는 단지 대선에서 투표하는 수준을 넘어서 민주당이라는 정당 조직에 상당히 접근하는 것이므로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립성 유지에 이롭지 않다.

또한 조직 노동자들의 민주당 경선 참가는 작업장이나 거리 투쟁보다 민주당 내부 대선 구도 문제로 빨려 들어



조직 노동자들의 민주당 경선 참가는 투쟁보다 민주당 내부 대선 구도 문제로 빨려들어가는 결과를 낼 것

가는 결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가령 이재명을 지지하러 민주당 경선에 참가한 노동자들은 경선 결과에 따라 본선에서 마음에 안 들어도 문재인이나 안희정 같은 당선 유력 후보를 뽑아야 한다는 논리를 강요받기 쉽다.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보수층을 의식하며 대중의 변화 기대감을 낮추려는 문재인과 그보다 더 오른

쪽인 안희정을 노동운동가들이 대거 지지하는 것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노동자 공격이라는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사실 이재명이 지금처럼 주요 대선 주자로 떠오른 것도 거대하게 일어난 퇴진 운동 덕분이었다. 이 점 때문에,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에도 민주당 밖에서 대

중 투쟁이 활성화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결국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대중 투쟁을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장기화되고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노동계급의 일자리와 임금, 소득에 대한 공격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물론 퇴진 운동의 열기가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집권 초기에는 ‘사회적 합의’라는 모양새를 취하며 부분 개혁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국면은 결코 오래 가지 못할 것이고, 민주당 정부는 금세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임을 예상하고 정치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특히, 대중 투쟁을 강화하려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정치적·조직적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

이정원

맥락을 초월한 정희진 씨의 <더러운 잠> 감상법

이현주

최근 정희진 씨는 <더러운 잠> 그림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경향신문> 2월 19일치). 박근혜를 비판하는 데 여성의 벗은 몸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나체는 남성에게 “쾌락”일 뿐이라고 한다. <더러운 잠>은 남성의 여성 지배 역사의 반복이며, 결국 보수든 진보든 남성은 폭력의 주체라고도 한다.

이는 부패하고 오만한 정권에 대한 항의라는 정치적 맥락을 추상한 채 그 그림을 해석하는 것이다. 그 그림은 세월호 7시간 당시 구조에는 무관심한 채 사생활이나 즐거움을 부패한 권력자를 명화에 빚대어 풍자하고 있다. 박근혜가 생물학적으로 여성이므로 여성의 몸이 사용된 것일 뿐, 작가가 전하고 한 메시지는 박근혜라는 이기적이고 무감각한 권력자를 조롱하는 것이지 ‘여성’의 몸이 아니다.(본지 196호 ‘계속되는 <더러운 잠> 논란 - 패러디 이고, 그 맥락을 봐야 한다’를 보시오.)

정희진 씨는 <더러운 잠>의 원작인 <올랭피아> 패러디가 매우 흔하다는 점도 놓치고 있다. 한 미술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올랭피아는 모든 서양 미술사 책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명화가 되었고, 현대미술을 태동시킨 중요 작품으로 인정된 지 오래다. 그리고 올랭피아를 통한 풍자와 패러디는 흔해 빠졌다. 더러운 잠과 같은 유형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무수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을 두고 성폭력, 여성 혐오, 국격을 훼손한 작품이라는 등의 궤변으로 폄하하는 이들의 미술에 대한 인식에 놀랐[다.]”(〈경향신문>, 박영택 경기대 교수·미술평론가)

무엇보다, 박근혜의 나체 묘사에서 “쾌락”이나 욕망을 느끼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 박근혜 반대자들에게는 박근혜에 대한 역겨움을 더한층 느끼게끔 하고, 박사모와 같은 자들에게는 커다란 분노와 모욕감을 줘, 감정적 양극화를 의도한 것이 작가의 모티브였을 법하다.



흔하디 흔한 <올랭피아> 패러디 박근혜가 여자라는 이유로 누드 풍자에 제한을 뒤야 할 이유는 없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

요컨대 나체 묘사나 성적 코드가 어떤 맥락에서 사용됐는지가 중요한 것이다. 가령, 같은 나체 합성 그림이어도 표창원 의원의 아내를 합성한 그림은 그저 저질의 인격모독일 뿐이다. 여성 연예인의 나체 합성 사진도 관음증을 이용해 돈을 벌거나 아니면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런 것들과 <더러운 잠>은 형식만 같지, 그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정희진 씨는 그림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회·정치적 맥락을 보지 않은 채 그저 ‘남 대 녀’의 문제로 환원한다. 그러나 박정희의 압제에 맞서 여성 노동자들이 싸운 이유가 박정희가 남성이어서가 아니고, 박근혜를 옥죄여 틀여가는 특검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남성성에 있지 않듯이, 노동자·민중이 박근혜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가 여성이어서가 아니다. “연약한 여성” 따위 운운하며 박근혜의 ‘여성성’을 강조하는 이들은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과 박사모이지, 평범한 여성들이 아

니다.

남녀 대립 구도로 환원해서 세상을 보면, 현실을 왜곡하기가 쉽다.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했던 2002년 미선이·효순이·충북 시위에서 나온 “fucking USA”(퍼킹 유에스에이) 구호가 “미국 여성을 강간하자”는 의미였다는 정희진 씨의 주장은 억지스럽게 꿰맞추려는 주장이다. 그 경우에 ‘fucking’은 ‘damn’ 등과 동의어로, ‘고약한’, ‘빌어먹을’, ‘망할 놈의’ 등을 뜻할 뿐이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려면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차별에 맞서 분투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맥락 없이 모든 문제를 남녀 대립 구도로 환원하는 접근법은 지양해야 한다.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분리주의적 환원론이 다수 여성의 삶을 악화시켜 온 박근혜 정부와 우파들에게 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적 보수주의의 문제는 없는가?

정희진 씨는 “남성에게 여성의 나체는 쾌락”이라면서 나체 묘사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한다. 이 사회는 가부장제 사회이므로 여성의 몸은 남성을 위한 쾌락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에 성적 대상화가 만연해 있고, 이에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나체 묘사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은 성적 보수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이런 사고라면 어떠한 경우에도 여성의 나체를 묘사한 것은 악행이 된다. 그러나 성 문제에 대한 부르주아 사회의 위선을 고려하면, 성적 보수주의는 남성들보다 오히려 여성들에게 해롭다. 여성

의 성적 욕망과 주체성이 더 쉽게 부정당하기 때문이다.

비혼모나 이혼 여성, 그 자녀들에 대한 낙인을 떠올려 보라. 성적 보수주의가 지배적일 때 ‘순결’은 여성이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이 되고, 심지어 여성이 상대방에게 먼저 구애하는 일조차 비난거리가 된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도리어 ‘정조를 잃은 여성’이라고 비난받는다. 일본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 전쟁 범죄의 피해자인데도 수십 년간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던 것은 가장 비극적인 사례다.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의 관계를 대하는 주류 사회의 태도에서 보듯이, 유부남과 젊은 미혼 여성의 연인관계가 드러났을 때도 더 많이 비난

받는 쪽은 여성이다.(정희진 씨가 이 관계를 비난했던 것이 우연일까?)

한편, 성적 보수주의는 결혼과 이성애에 기초한 관계만을 ‘정상’으로 여기게 해, 성소수자들이 자신을 긍정하고 드러내기도 어렵게 만든다.

여성 몸의 상품화와 대상화에 대한 반감이 성적 코드 자체가 차별을 낳는다는 오해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 성에 대한 개방적 토론과 표현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문제는 성 해방에 대한 보통 사람들의 열망을 이윤 논리로 왜곡한 자본주의 체제이다. 정희진 씨는 지배자들의 부패와 탐욕, 위선과 거짓말에 대한 남녀 민중의 혐오와 증오를 올바른 과녁으로 돌리도록 도와 줘야 할 것이다.

3.8 세계 여성의 날 맞이

여성해방 하루학교

일시 3월 5일(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50분

장소 서울 중부여성발전센터 2층 강당
(지하철 5호선 마포역 1번 출구에서 250m)

주최 노동자연대

참가비 15,000원 (대학생 할인가 10,000원 / 청소년 할인가 7,000원)

문의 02-2271-2395 / 010-4909-2026 (문자 가능)
mail@workerssolidarity.org www.workerssolidarity.org

오전 10:00 ~ 11:30

러시아 혁명 100년 - 러시아 혁명과 여성해방

연사: 정진희 '노동자연대' 활동가,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여성해방론》 역은이

오전 11:50 ~ 오후 1:20

오늘날 여성 차별의 현실과 쟁점

연사: 이현주 <노동자 연대> 기자

오후 2:30 ~ 4:00

한국 여성운동의 역사

연사: 정진희 '노동자연대' 활동가,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오후 4:20 ~ 5:50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여성해방

연사: 최미진 '노동자연대' 활동가, 《낙태, 여성이 선택할 권리》 공저자

2017년 노동자 투쟁과 활동가들의 과제

김하영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 팀장

1. 2016년의 근로손실일수는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합원 수가 많은 노동조합들이 여러 차례 파업을 벌인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노동개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자들의 갈등이 2015년에 이어 계속된 것이 주된 요인이었다. 국회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원은 이렇게 인정했다. “노정 대립은 [근로손실일수 같은] 수치로는 표현할 수 없는 2016년의 지배적인 노사관계 양태였다.” 2016년 노동자 투쟁이 2015년 ‘노동 개혁’ 저지 투쟁의 연장이었다는 것은 총선 결과와 그것이 하반기 투쟁에 미친 영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이 표출된 것은, 2015년 조직 노동자들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이 정당했음을 사실상 확인해 주는 것이었다. 그런 만큼 총선 결과는 노동자 투쟁을 고무했다. 한편 총선 결과는 경제 위기와 함께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켰는데, 이는 노동자 투쟁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7월 이후 근로손실일수는 급상승했다.

여러 부문 노동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는 기업주들과 박근혜 정부에 맞서 상당히 저항했다. 조선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이 있었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도 벌어졌다. 특히 철도 노동자들이 장기 파업을 했다. 임금과 단결, 노동조합 공격에 맞선 민간부문 노동자들의 투쟁도 벌어졌다. 갑을오르락 노동자들은 공장 점거 파업에 나섰다. 기아차나 GM대우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투쟁에 나섰다. 이런 투쟁들은 여러 전선에서 벌어진 노동개악 저지 투쟁이기도 했다.

이처럼 2015~16년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는 주요 세력이었다. 다른 어떤 사회집단도 이와 같은 지속적 저항을 보여 주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밑거름을 쌓은 것도 노동자 운동이었다. 총선 이후 격화된 지배자들의 갈등이 10월 하순 ‘최순실 게이트’로 폭발했을 때, 이미 몸을 움직이고 있던 노동자 운동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 초기 ‘자본’을 대고 투쟁을 키워는 도약대 구실을 했다.

그러나 2016년의 상황 전개는 노동운동의 약점도 잘 보여 줬다. 우선, 총선 이후의 정치 상황을 이용해 노동자

투쟁을 더욱 전진시켜야 했는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면이 있다. 노동운동 단체 상당수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리라고 잘못 전망한 것이 나쁜 영향을 미쳤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은 잘못된 전망 때문에 하반기 투쟁을 좀 더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배치하거나 이끌지 못했다. 정치(투쟁)와 경제(투쟁)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런 약점을 낳았다. 부분적으로는 진보·좌파 진영에 만연한 조직 노동자 운동에 대한 불신 또는 확신 결여도 영향을 미쳤다. 조직 노동자 운동이 고립돼 있다는 생각 때문에 ‘노동개혁’ 저지 투쟁이 대중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것이 총선 지형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비슷한 문제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서도 나타났다. 퇴진 운동 속에서 노동자 운동이 자신의 고유 요구와 투쟁 방법으로 전진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노동자 투쟁의 초기 능동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회피해졌지만 총선 결과는 경제 위기와 함께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켰는데, 이는 노동자 투쟁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했다. 실제로 7월 이후 근로손실일수는 급상승했다.

2. 2017년 노동자 투쟁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너무 불확실하고 불안정해서 전망하기 어렵다고들 한다. 급변을 낳을 수 있는 사례를 들었듯이 하반기에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이러저러한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전투적 전술을 회피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하고 수세에 몰리거나, 성과 없이 종료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장기간의 철도 파업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 운동에 초기 ‘자본’을 대고 투쟁을 키워는 도약대 구실을 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불만이 꽤 있지만 대안을 발견하지 못했다. 때문



노동자 운동이 박근혜 퇴진 운동의 도약대 구실을 했다.

에 그 불만은 주로 혼란과 냉소로 나타났다. 노동조합 내 좌파들은 대부분 노동조합 집행부 배출하기라는 오래된 활동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할 의지도 능력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면 그 첫째,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고조되는 순간에도 단호한 총파업에 나서지 않았다. 정치 운동과 산업 행동을 분리하면서 정치 운동을 위해 노동자들 고유의 힘을 동원하는 일에 소심했던 것이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소심함과 불가피하지 않은 타협은 하반기에 벌어진 다른 투쟁들에서도 거듭 나타났다. 앞서서 사례를 들었듯이 하반기에 여러 부문의 노동자들이 이러저러한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전투적 전술을 회피하면서 파업이 장기화하고 수세에 몰리거나, 성과 없이 종료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장기간의 철도 파업이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현장 조합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 운동에 초기 ‘자본’을 대고 투쟁을 키워는 도약대 구실을 했다.

그러나 2016년의 상황 전개는 노동운동의 약점도 잘 보여 줬다. 우선, 총선 이후의 정치 상황을 이용해 노동자 투쟁을 더욱 전진시켜야 했는데,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면이 있다. 노동운동 단체 상당수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리라고 잘못 전망한 것이 나쁜 영향을 미쳤다. 안타깝게도 민주노총은 잘못된 전망 때문에 하반기 투쟁을 좀 더 과감하고 자신감 있게 배치하거나 이끌지 못했다. 정치(투쟁)와 경제(투쟁)의 상호 작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 이런 약점을 낳았다. 부분적으로는 진보·좌파 진영에 만연한 조직 노동자 운동에 대한 불신 또는 확신 결여도 영향을 미쳤다. 조직 노동자 운동이 고립돼 있다는 생각 때문에 ‘노동개혁’ 저지 투쟁이 대중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것이 총선 지형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다.

비슷한 문제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에서도 나타났다. 퇴진 운동 속에서 노동자 운동이 자신의 고유 요구와 투쟁 방법으로 전진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노동자 투쟁의 초기 능동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회피해졌지만 총선 결과는 경제 위기와 함께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켰는데, 이는 노동자 투쟁에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기도 했다.



2016년 노사관계의 지배적인 양태는 정부와 노동자들의 갈등이었다.

급의 상태이다. 노동계급이 어떤 상태에서 경제 위기를 맞이하느냐에 따라 투쟁 수위가 상당히 달라진다. 진보·좌파들은 대부분 한국 노동자 계급이 악화했거나 해체됐다고 여긴다. 1987년과 1997년 투쟁은 그 직접 강력 출발로 노동운동이 직면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할 사회주의자들의 응집력 있는 조직이 현장에 필요하다.

그러나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더라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변화라고는 기껏해야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양보를 합의 모양새로 만들어 내는 것일 뿐이기 쉽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전망을 내다보면서, 정권이 교체되기 전이든 후이든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런 투쟁이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지금 누적된 문제들이 산발적 노동자 투쟁을 부차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과 일자리 공격 문제든, 임금 격차 문제든 이를 해결할 진정한 힘은 기존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다.

물론 이것은 단지 ‘투쟁’을 외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의 대안 노선에 개입해야 한다. 이미 조업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재벌 개혁과 원하청 공경 거래를 통한 노동자 격차 해소, 노사정위의 새 틀 마련을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이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이 메울로기 투쟁을 잘 하고 이를 경제 투

쟁, 정치 투쟁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경제 위기 시기에 심화될 수 있는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을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주와 정부는 노동자 투쟁이 계급 대(對) 계급의 양극화를 낳지 못하도록 노동자 계급 내부의 반목을 부추기려 애쓸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간질 등을 통해서 말이다. 노동조합은 ‘체제의 희생자를 비난하지 말고 체제를 비난하라’고 노동자들을 설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연대 건설에 애써야 하며, 정규직 양보론이 아닌 진정한 계급 단결을 위한 정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더라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변화라고는 기껏해야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양보를 합의 모양새로 만들어 내는 것일 뿐이기 쉽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전망을 내다보면서, 정권이 교체되기 전이든 후이든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런 투쟁이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지금 누적된 문제들이 산발적 노동자 투쟁을 부차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과 일자리 공격 문제든, 임금 격차 문제든 이를 해결할 진정한 힘은 기존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다.

물론 이것은 단지 ‘투쟁’을 외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의 대안 노선에 개입해야 한다. 이미 조업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재벌 개혁과 원하청 공경 거래를 통한 노동자 격차 해소, 노사정위의 새 틀 마련을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이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이 메울로기 투쟁을 잘 하고 이를 경제 투

쟁, 정치 투쟁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경제 위기 시기에 심화될 수 있는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을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주와 정부는 노동자 투쟁이 계급 대(對) 계급의 양극화를 낳지 못하도록 노동자 계급 내부의 반목을 부추기려 애쓸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간질 등을 통해서 말이다. 노동조합은 ‘체제의 희생자를 비난하지 말고 체제를 비난하라’고 노동자들을 설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연대 건설에 애써야 하며, 정규직 양보론이 아닌 진정한 계급 단결을 위한 정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더라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변화라고는 기껏해야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양보를 합의 모양새로 만들어 내는 것일 뿐이기 쉽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전망을 내다보면서, 정권이 교체되기 전이든 후이든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런 투쟁이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지금 누적된 문제들이 산발적 노동자 투쟁을 부차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과 일자리 공격 문제든, 임금 격차 문제든 이를 해결할 진정한 힘은 기존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다.

물론 이것은 단지 ‘투쟁’을 외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의 대안 노선에 개입해야 한다. 이미 조업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재벌 개혁과 원하청 공경 거래를 통한 노동자 격차 해소, 노사정위의 새 틀 마련을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이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이 메울로기 투쟁을 잘 하고 이를 경제 투

쟁, 정치 투쟁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경제 위기 시기에 심화될 수 있는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을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주와 정부는 노동자 투쟁이 계급 대(對) 계급의 양극화를 낳지 못하도록 노동자 계급 내부의 반목을 부추기려 애쓸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간질 등을 통해서 말이다. 노동조합은 ‘체제의 희생자를 비난하지 말고 체제를 비난하라’고 노동자들을 설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연대 건설에 애써야 하며, 정규직 양보론이 아닌 진정한 계급 단결을 위한 정치를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권이 민주당으로 교체되더라도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기 위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다. 변화라고는 기껏해야 노동자들에게 강요된 양보를 합의 모양새로 만들어 내는 것일 뿐이기 쉽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은 이런 전망을 내다보면서, 정권이 교체되기 전이든 후이든 독립적인 노동자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그런 투쟁이 건설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지금 누적된 문제들이 산발적 노동자 투쟁을 부차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임금과 일자리 공격 문제든, 임금 격차 문제든 이를 해결할 진정한 힘은 기존 노동자들의 투쟁에 있다.

물론 이것은 단지 ‘투쟁’을 외친다고 되는 일은 아니다. 노동조합 내 좌파 활동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의 대안 노선에 개입해야 한다. 이미 조업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재벌 개혁과 원하청 공경 거래를 통한 노동자 격차 해소, 노사정위의 새 틀 마련을 통한 사회적 대화 추진 등이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둘러싼 이 메울로기 투쟁을 잘 하고 이를 경제 투

쟁, 정치 투쟁과 연결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경제 위기 시기에 심화될 수 있는 노동자들 사이의 반목을 극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기업주와 정부는 노동자 투쟁이 계급 대(對) 계급의 양극화를 낳지 못하도록 노동자 계급 내부의 반목을 부추기려 애쓸 것이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격,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이간질 등을 통해서 말이다. 노동조합은 ‘체제의 희생자를 비난하지 말고 체제를 비난하라’고 노동자들을 설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위한 노력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연대 건설에 애써야 하며, 정규직 양보론이 아닌 진정한 계급 단결을 위한 정치를 제시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미국 지배자들의 트럼프 ‘길들이기’ 시도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 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다.

오늘날 정치에서 눈에 띄는 점 중 하나는 지배계급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한다.

영국에서는 거짓말의 제왕 토니 블레어가 [유럽연합] 잔류파의 최후의 보루를 자처하면서 그런 광경이 펼쳐졌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지배계급 다수 사이의 다툼이 심해지면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안보국(NSA)과 연방수사국(FBI)의 사찰과 정보 유출의 결과로 트럼프의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클 플린의 임명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질된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큰 사건이었다.

플린은 러시아 당국과 내통했다는 정보를 <워싱턴 포스트>에 제공한 정보기관 인사가 최소 아홉 명이었다. 그래서 트럼프가 “정보기관”이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한 것은 맞는 말이다. 최근, 기득권층의 총출진 대변자 신론 <뉴욕 타임스>와 좌파 언론 <자코팬>이 모두 “심층 국가”를 다룬 기사를 보도했다.

‘심층 국가’ 개념은 터키에서 처음 등장했는데, 군부를 중심으로 한 비밀 네트워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부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미국에서 ‘심층 국가’는 딱히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다. [국제법 교수이자 보수적 지식인] 마이클 글레넨은 최근에 “이중 정부”를 다룬 책

을 출판해, 미국 현정의 주춧돌이라는 대통령(행정부), 의회, 대법원이 “장식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글레넨은 “실제로” 정부 구실을 하는 것은 ‘공안 세력’(역자 주: 원문은 “트루먼주의자 네트워크”(Trumanite network))”이라고 주장한다. 이 ‘공안 세력’은 1940년대 후반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절에 설립된 미국 국가 안보 기구들에 뿌리를 틀고 있는 집단이다.

글레넨은 국방부와 중앙정보국(CIA) 등 국가 안보 기구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 기구들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서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이 하는 구실을 과소평가한다.

그러나 대학, 기업, 안보 기구 등 핵심 기관을 돌며 한자리씩 차지하는 핵심 인사들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미국 국가의 관리자들이라고 부를 만한 대표적 인물로는 전 법원 헨리 키신저, 오랫동안 연방준

비제도이사회(수장)를 역임한 앨런 그린스펀이 있다.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공화당 내의 이런 인사들은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되는 것에 저항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미국 제국주의에 봉사해 온 나토 같은 국제 기구들을 트럼프가 적대시하는 것에 격분했다. 그들은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2월 18일 플로리다 연설 때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고 한 것에도 분노한다.

격분

트럼프는 자신의 인종차별주의와 국수주의에 동조하는 자들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한편, 미국 지배자 일반의 승인을 위해 이 핵심 인사들도 내각에 많이 기용하려 했다. 전자의 대표 인물은 스티븐 배넌이다.

배넌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국제 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는 소망을 공공연히 드러내 왔던 자다.

2월 14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레이먼드 토머스가 말한 것처럼, 미국 “정부는 계속해서 믿기 어려운 만큼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2월 18일 부통령 마이크 펜스는 펜 헨안보회의에 참석해 연설하며 미국이 앞으로도 나토를 지원할 것이라고 유럽 지배계급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바로 몇 시간 후 트럼프는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쓰지 않는다면 기존의 불평을 되풀이했다. “미국은 더는 미국에 도움될 것 없는 전투를 치르고 있다. 싸우는 것은 미국인데, 다른 사람들은 미국의 공로를 공경하게 사 주지 않는다.”

상황이 이러니, ‘공안 세력’의 트럼프 공격이 마이클 플린 경질로 끝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면 미국 지배계급 전체가 트럼프에 등을 돌린 것일까? <워싱턴 포스트>는 하버드대학교의 기업사 연구자 낸시 콘이 한 말을 인용했다. “트럼프의 [무슬림] 입국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기업의 대응 속도는 ‘전례 없이’ 빨랐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 기업들에 감세와 규제 완화라는 선물 보따리를 안겨 주리라는 기대 때문에 지난주 [미국] 주가는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정부의 운명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배계급이] 새 정부를 길들이 다른 방법을 찾으려 애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난 몇 주 사이 있었던 일을 보면, 트럼프는 지배계급의 ‘길들이기’ 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

미국 국가라는 배가 폭풍우 치는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42호 / 번역 김준효

미국 노동부 장관 내정자 낙마

패스트푸드 노동자들이 핵심적 구실을 하다

트럼프가 내각의 결속을 유지하는 데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화당과 미국 기성 정치권의 상층부를 차지하는 지독한 인종차별·성차별주의자들 중 일부조차 탄마음을 품고 있다.

먼저, 트럼프가 직접 지명한 국가 안보보좌관이자 무슬림 혐오론자인 마이클 플린이 경질됐다. 플린은 대선이 한창일 때 주미 러시아 대사와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했다.

플린의 후임으로 트럼프가 지목한 군부 출신 인사 로버트 하워드 역시 국가안보보좌관 자리를 고사했다. 미국 지배계급의 일부는 어떻게든 트럼프와 엮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결국, 육군 중장 허버트 R 맥매스 터가 독배를 받았다.

그러나 더 눈에 띄는 일은 트럼프가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앤디 퍼즈더가 압력에 밀려 물러난 것일 듯 하다. 앤디 퍼즈더는 [하디스와 칼스 주니어 등] 여러 패스트푸드 기업의



“퍼즈더도 백악관도 패스트푸드 노동자 운동을 물리칠 태세를 갖추지 못했고, 그 때문에 내정자가 낙마했다.” — 미국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한면.

CEO를 겸하고 있는 자다.

주류 언론들은 퍼즈더 낙마에서 조직 노동자들이 핵심적 구실을 했음을 무시한다. ‘최저임금 15달러 정취’ 활동을 하는 애너 서스먼은 노동자들이 어떻게 퍼즈더를 낙마시켰는지를 설명했다. “전국세로탕협회(NRA) 등 기업주 단체들은 궁지에 몰린 앤디 퍼즈더를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분

방질을 쳤습니다. 그러나 퍼즈더 반대 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았고, 그가 지명된 첫날부터 항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전국 고용법 프로젝트”, ‘정의로운 일터’ 등 저임금 노동자 권익 보호 단체, 지역 사회단체, 활동가들이 힘을 합쳐 운동을 벌였다.

서스먼은 이렇게 말했다. “1월 초

부터 전국 수십 곳에서 패스트푸드 노동자 수천 명이 대규모 거리 시위를 세 차례나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은 퍼즈더의 패스트푸드 체인점 중 하나인 하디스의 본사를 점거했다.

노동자들은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시위를 벌였다. SNS에서도 캠페인이 벌어져, 해시태그 #NotOurLaborSec에 우리 노동부 장관 아님을 낸 게시물이 4천 2백만 건이나 게시됐다. 노동자들은 퍼즈더가 운영하는 기업을 임금 체불, 성추행, 노동자 협박 등으로 고소했는데, 39건이나 된다.

이 같은 항의 행동은 앞으로 계속 될 운동에서 노동자들이 더 큰 구실을 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 줬다. 노동조합들은 트럼프에 맞선 정치적 투쟁에 함께할 수 있고, 함께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42호 / 번역 김준효

건설

내국인 노동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아름다운 연대

① 과천

2월 18일 과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공사에 투입된 형틀목수 1백여 명이 반나절 동안 파업을 벌였다. 지하 주차장 공사에는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이뤄진 한 팀을 포함해 다섯 팀이 참여하고 있다. 그중 상당수는 재중 동포를 포함한 중국 이주노동자들인데, 팀별로 수백만 원에서 2천여만 원까지 임금이 체불돼 있었다. 월급날인 2월 10일이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도 사측이 이런저런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자, 노동자들이 더는 못 참겠다며 작업을 거부한 것이다.

아침 7시 조회 시간, 임금이 가장 많이 체불된 이주노동자 팀 노동자들이 사측에 항의하며 작업 거부를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이주노동자 팀들과 건설노조 조합원 팀도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싸우자고 뜻을 모았다.

건설노조 조합원 팀은 이미 이를 전에 항의해서 임금을 받았지만, 단체협약상의 복지비와 노조전임비를 몇 달째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내걸고 파업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무엇보다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같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수천만 원을 받지 못해 항의하는 것에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함께 뜻을 모아 일손을 놓기로 결정한 후, 우선 공사장 곳곳에 삼삼오오 흩어져 있던 노동자들을 안전교육장으로 한데 모았다. 파업에 불참하고 작업 중이던 팀도 설득해 동참시켰다. 노동자들이 한데 모이자, 건설노조 조합원 팀의 팀장이 사람들 앞에 나서서 중국인 팀장에게 통역을 요청하고 이렇게

연설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위해 파업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다. 한국인이든 중국인이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노동자는 모두 하나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만들어졌다. 우리는 민주노총의 정신에 따라 함께 싸우겠다.”

그 자리에 모인 노동자들이 모두 뜨거운 박수로 화답했고, 모처럼 현장에는 먼지와 시끄러운 망치 소리가 아니라 연대의 훈훈한 기운이 가득 찼다.

이런 사태 전개에 놀랐는지 주말인데도 본사 담당자가 직접 달려왔다. 사측 담당자는 처음에 ‘이렇게 일손을 놓으면 회사의 손해가 얼마인 줄 아느냐?’ 하며 으름장을 놓았지만, 이미 함께 뿔뿔 뿔쳐 있던 노동자들은 동요하거나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한 재중 동포 노동자는 “임금이 체불됐을 뿐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누구에게나 적립되는 퇴직공제부금 4천 원이 한 번도 신고되지 않았다”면서 거세게 항의했다.

결국 사측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퇴직공제부금 누락도 시정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를 뒤인 2월 20일 월요일 모든 체불임금과 건설노조 조합원팀의 노조전임비, 복지비 등이 해결됐다.

반나절 동안의 짧은 경험이었지만,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함께 뿔뿔 싸우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전에는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자재나 공정 문제를 놓고 서로 싸우기도 했는데, 투쟁 이후에는 이런 일들이 사라졌다. 함께 투쟁하면서, 건설 노동자들 사이에 있던 경쟁심과 벽이 공감과 연대의 정서로 바뀐 것이다.

음광석 건설노조 중서부건설지부 조합원



“노동자는 하나다” 2월 18일 과천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지급 투쟁에 내국인 노동자들이 연대 파업을 해 승리했다.

② 포항

지난주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이하 대경지부)가 포항의 한 건설 현장에서 경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항의해 투쟁했다.

대경지부는 불법하도급 근절과 ‘시다오게 노조’(다단계 하도급 최하 단계에서 노동자를 고용하는 팀장이 중심이 된 노조)에 맞서 투쟁을 벌이던 중이었는데, ‘시다오게 노조’가 현장 진입이 어려워지자 경찰과 출입국사무소에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요청했다.

대경지부는 단속을 나온 법무부 단속반과 경찰이 현장을 수색하는 것에 강력하게 항의했다. 대경지부의 발 빠른 대응으로 잡혀간 이주노동자가 다

행히 없었다고 한다.

이 투쟁 덕분에 원청과 전문건설업체(하청회사)들과의 교섭에서 대경지부의 힘이 커졌다. 반면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이주노동자를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고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노조의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민주노총으로 가입하자’는 얘기가 돌고 있다고 한다.

대경지부의 한 간부는 ‘건설 경기 악화로 생활조건이 악화하자 조합원들 사이에는 이주노동자를 굶지 않게 보는 정서도 있지만,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흔쾌히 여기는 조합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필자도 소속 지부에서 ‘우리보다 약자인 이주노동자를 공격해 우리 조건을 지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동료들 소속 지부에서 심심찮게 만나곤 한다.

필자를 포함해 이주노동자와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설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건설 경기가 더 악화하면 이주노동자 배치 정서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건설노조 현장 활동가들이 지금부터 이주노동자 방어의 중요성을 적극 주장하고 지부들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 또, 건설노조 중앙이 이주노동자를 옹호하는 확고한 입장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를 노동조합으로 조직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다. 노동자는 모두 단결해야 한다.

전용수 건설노조 경기남부타워크레인지부 조합원

연세대 송도 캠퍼스를 보면
서울대 시흥캠퍼스가 보인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철회시키기 위해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

시흥캠퍼스 계획의 모델이 바로 연세대의 송도 캠퍼스이다. 송도 캠퍼스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이점을 활용하려는 것이었다.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도, 교육의 평등도, 환경도 더욱 쉽게 파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학교 입장에서 이런 곳에 학교를 지으면 비정규직을 늘리고 노동자들에게 더 열악한 처지를 강요해 수익성

을 높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송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유급 휴일이나, 유급 생리 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파견직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이렇게 남긴 돈은 이른바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투자할 수 있다.

연세대는 2006년 당시 인천시장 안상수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송도 캠퍼스 건설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이런 일은 공개된 적도, 민주적으로 토론된 적도 없었다.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도 학교 측은 “타 대학과의 경쟁 때문에 비공개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답을

내놓았다.

연세대 학생들은 송도 캠퍼스가 학생들에게 왜 필요한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공공성이 보장돼야 할 대학을 왜 경제자유구역에 건설하는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1백8일간의 점거 투쟁을 벌였다.

그러나 송도 신도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은 곧 무너지고 말았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의 여파로 경제자유구역이 생각만큼 활성화되지 않았고 송도 신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다. 학교는 학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송도 캠퍼스 건설을 밀어붙였지만, 정작

건설이 진행될 때쯤엔 이미 ‘망한’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학생들의 필요나 안전은
우선순위에 없는 학교

학교는 이러한 손실을 충당하려고 안전을 위한 비용을 줄여 버렸다. 부실공사 때문에 2016년 9~10월 사이에 엘리베이터 고장·급추락이 31번이나 일어났고,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는 수준의 누수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강의동 천장이 무너지기도 했다. 심지어 기숙사에 쥐가 나오는 일까지 생겼다.

송도 캠퍼스 완공 이후, 연세대는 몇몇 학부들을 강제로 송도 캠퍼스로 보내 버렸다. 이 학부들은 특히 비싼 등록금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도 학교 측은 송도 캠퍼스 운영을 근거로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06년 본관 점거 투쟁에 들어갔던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던 것이다. 당시 학교는 송도 캠퍼스 관련 비용을 등록금

에 전가하지 않겠다며 큰소리쳤었다.

연세대는 2013년부터 1학년 신입생 전원을 송도 캠퍼스로 보내고 송도 기숙사에 의무 거주하도록 했다. 이에 반발해 2012년에는 학생 2천여명이 시위도 벌였지만 당시 총장이던 정갑영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많은 학생들이 이 조치를 두고 “유배 간다” 하고 비꼬았다.

RC(의무 기숙사) 프로그램에도 학생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학교 측은 이성의 방에 출입할 때 별점을 매기고, 통금 시간을 두는 등 학생들을 통제했다. 학교는 이런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다.

서울대와 비슷하게, 연세대는 송도 캠퍼스 계획이 나온 지 몇 년 안 돼 신촌 캠퍼스 백양로 지하 공간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백양로 공사는 학생들이 아니라 주차비와 임대료 수익을 챙기기 위한 것이었다. 현재 주차장을 제외한 백양로

▶ 9면으로 이어짐

상법 개정안 논란

노동이사제는 노동자의 처지를 개선하지 못한다

강동훈

삼성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이 박근혜 정부와 결탁해 비리를 저질러 온 점이 드러나며 재벌 총수 비판 여론이 커지자, 민주당 등 야당들은 '경제민주화'의 상징으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대주주의 의결권을 3퍼센트로 제한), 집중투표제(이사를 여러명 선임할 때 여러 표를 특정 후보에게 집중 투표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 다중대표소송(모회사의 주식 1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 노동자 대표 추천 사외이사 선임 등이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취지는 소수 주주가 지지한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기업 운영을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재계와 우익들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한다며 격렬하게 반대했다. 한 우익 인사는 “자유시장 질서를 파괴해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었다. 박근혜 정부와 자유한국당·바른정당도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보수 정당들의 격렬한 반대는 회사 돈을 제멋대로 사용하고 노동자들을 머슴 부리듯 해 온 기업주들이 주주들에게 기업 운영을 공개하는 사소한 개혁조차 반대하며 기득권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민주당 등이 제안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다수 노동자들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점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집중투표제를 이용해 이사를 선임하려면 최소 20~30퍼센트의 지분을 모아야 한다. 제법 큰 대주주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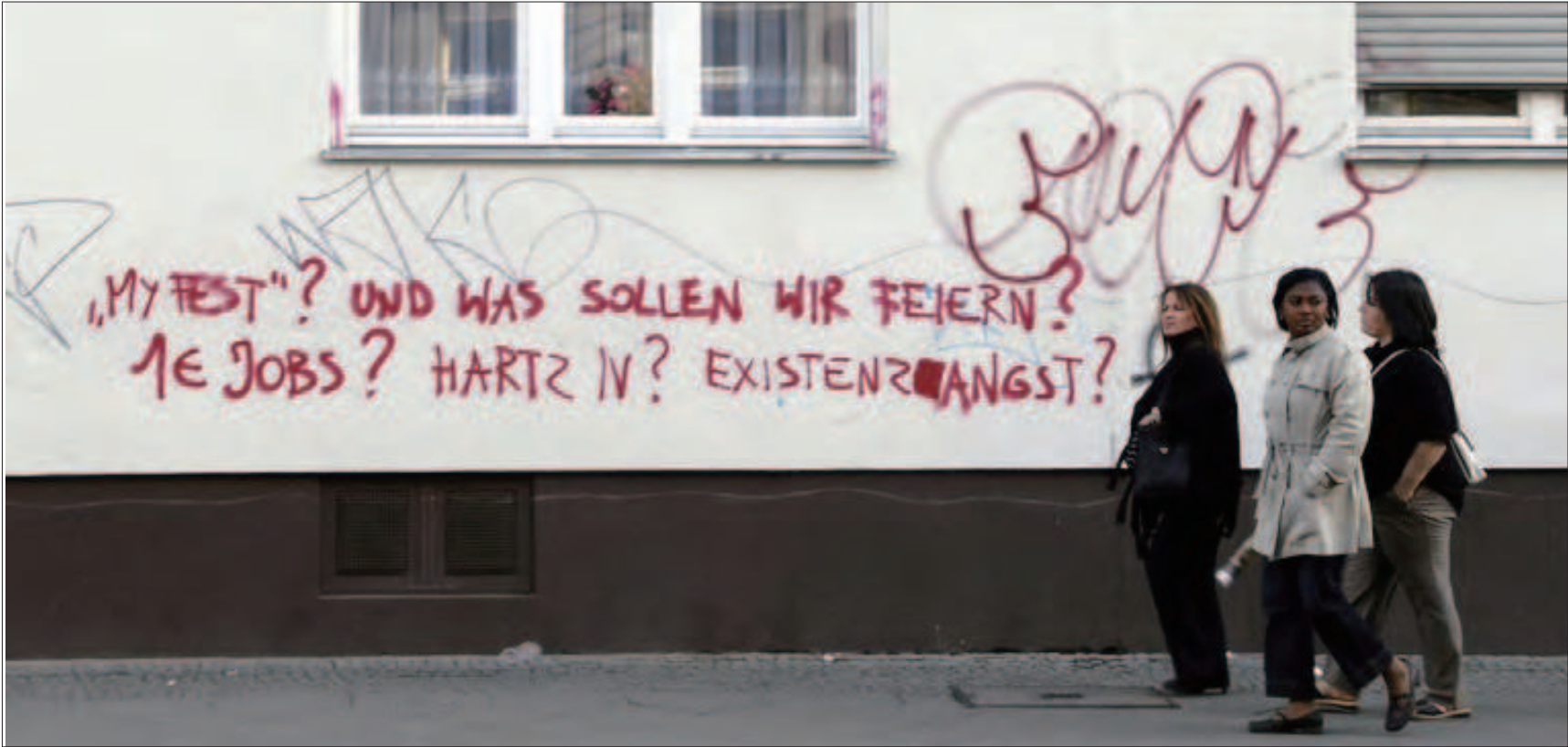


사진 출처: Henning Oken (플리커)

“내 회사라고? 우리가 무엇을 기념해야 하는가? 1유로 일자리? 하르츠 개혁?” 독일에서는 노동이사제가 발달해 있지만 고용 불안정과 비정규직 확대를 막지 못했다.

이런 대주주들이 이사 한두 명을 선임한다고 해도, (하청 노동자를 포함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거나, 제품의 가격을 낮춰 보통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호들갑

한편, 상법 개정안 논란이 커지면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내놓은 상법 개정안은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를 임명하기 시작했고, 이재명 성남시장도 성남시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도 노동자 대표 추천 사외이사제를 공공부문에 먼저 도입한 뒤 4대 재벌과 10대 재벌 순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놔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를 기업 이사회에 파견하는 제도로, 노조 경영 참여의 한 방법으로 개혁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제도 중 하나다. 노조의 경영 참여로 기업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노동자들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면서 말이다.

노동이사제는 유럽의 19개국이 채택하고 있는데, 그중 독일은 유럽에서도 노조의 경영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대기업(노동자 2천명 이상)은 노사 동수로 구성된 ‘감독자사회’가 ‘경영이사회’의 주요 결정을 감독할 권한이 있어, 노동자들이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독일에서조차 노동자들은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결정권을 전혀 갖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감독자사회 의장은 사측 인물이 차지하도록 돼 있고, 노사 간에 동수로 맞설 때는 의장

이 2표를 행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의 노동이사제는 신자유주의 개악과 임금 삭감과 해고 등을 막는 구실을 거의 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노동이사제는 2000년대에 신자유주의 개악인 ‘하르츠 개혁’을 전혀 막지 못했고, 이에 따라 오늘날 독일 일자리의 거의 4분의 1이 저임금·시간제 일자리이다.

게다가 독일의 거대 자동차 기업인 폭스바겐에서 2005년에 터진 노조 간부와 결탁한 섹스관광, 불법보너스 수수 문제나, 최근에 터진 디젤 자동차 연비 조작 사건 등은 노동이사제가 ‘기업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설사 기업이 아무리 ‘투명 경영’을 하더라도 경제 위기와 시장 경쟁의 압력은 임금 삭감이나 노동강도 강화, 정리해고를 하도록 만든다. 이때 노동자 경

영 참여는 일부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다른 노동자들이 승인하도록 하는 구실을 하게 된다.

노동이사제를 적극 지지하는 〈한겨레〉의 보도 내용을 보더라도, 노동이사는 명예퇴직, 수당 삭감, 신입사원 임금 삭감 등을 요구하는 사측에 협력하며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구실을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노동이사제는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과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대안이 될 수 없다. 특히나 노조 지도부가 기업주(정부)와의 협상에 매달리게 만들어 노동자들의 투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성도 크다.

따라서 노동이사제를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대한 환상을 품지 말고 노동 현장의 조직력과 투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다.

▶ 8면에서 이어짐

지하 공간의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상업 시설이거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아트홀과 비싼 고급 식당들이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백양로 공사를 반대하며 농성까지 벌였지만, 학교 측은 새벽에 기습적으로 농성장을 철거하고 공사를 강행했다.

송도 캠퍼스와 백양로 공사로 재정 압박을 받은 총무처는 학내 노동자들에게 “인건비 50억 원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했다. 정갑영 총장 재임 기간 동안 교직원 약 1백10명이 ‘희망퇴직’이라는 이름 하에 일자리를 잃어야만 했다. 학교 측은 이 방법으로 약 2년간 20억 원을 벌어들인 한편, 교직원들의 노동 강도는 더욱 강해졌다.

이후로도 개악은 계속되고 있다. 신입 총장인 김용학 교수는 공약으로 “관리 운영비를 매년 2백억 원씩 줄이겠다”고 했다. 등록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하고 있다. 당장 올해 정원 외 외국인 학생들의 등록금



반민주적 밀실 체결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실시현약 즉각 철회하라

“성낙인 총장이 주는 졸업장이 부끄럽다” 2월 24일 졸업식장 시위.

을 차등 인상하겠다고 한다.

송도 캠퍼스 건설 이후 연세대 학생들이 겪은 일들을 보면, 서울대 학생들의 점거 투쟁이 얼마나 정당한지 알 수 있다. 서울대 시흥 캠퍼스는 지난 10년간 연세대에서 벌어진 일들과 비슷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연세대 이외에도 대학 기업화로 고통 받고 있는 전국의 대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을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이 꼭 승리 하길 기원한다.

오제하 연세대 학생

※ 전문은 온라인 기사를 보시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노동자연대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대중의 삶을 희생시키는 자본주의를 반대하고 이와는 다른 세계를 추구하는 노동자 운동 단체입니다.

노동자연대는 다른 세상을 만들 힘은 노동자 계급과 피억압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있다고 믿으며, 노동자 투쟁에 참여하고, 연대를 건설하고, 투쟁 승리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자·학생·청년 등으로 구성돼 있고, 서울, 부산, 인천, 경기, 울산, 강원충북 등에 지회들이 있습니다. 전교조·공무원·금속·건설 등에 노동자 모임이 있으며, 더 많은 부문에서 노동자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름 _____

이메일 _____

소속 (☐ 직장 | ☐ 노조 | ☐ 대학교 | ☐ 중고등학교 | ☐ 기타) _____

☎테휴대전화번호 _____

회비약정액 (회비 기준액은 월 2만 원 이상 단 대학생은 1만 원, 청소년·이주노동자 5천 원 이상)

☐ 2만 원 | ☐ 3만 원 | ☐ 4만 원 | ☐ 5만 원 | ☐ 기타 () 원

※ 본인은 위의 정보를 노동자연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입 신청일: 년 월 일 (서명)

www.workerssolidarity.org

※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010-4909-2026 또는 mail@workerssolidarity.org로 보내주세요.

※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 02-2271-2395 / 팩스 02-2271-2396 / 이메일 mail@workerssolidarity.org

스탈린주의란 무엇인가?

최일봉

“비운의 북한 황태자” 김정남이 이북 동생의 치명적 경계심으로 마침내 비명에 갔다. 김일성 동생 김영주가 18년 동안 귀양살이를 한 적이 있고, 김정일의 이북동생 김평일이 40년 가까이 유럽에서 유배돼 있고, 김정은의 고모부장성택이 4년 전 처형됐고, 장성택 처형 이후 장성택의 아내이자 김정일의 여동생이자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는 공식석상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참으로 대단한 집안이다. 그런데 김정은이 이런 잔인한 짓을 한 때가 남한에서 반정부 운동이 한창이라는 사실이 시사적이다.

옛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1937~38년 이른바 모스크바 재판을 통해 옛 동지들을 다 살해하고 공포 통치를 강화했다.

스탈린이 이런 유혈 숙청을 벌이던 때가 프랑스 노동계급의 전국적 공장 점거 운동이, 그리고 스페인 노동계급과 빈농의 반파시스트 혁명과 내전이 한창이었다는 사실도 시사적이다.

실제로, 옛 소련 몰락 후 기밀해제된 문서들에 따르면, 스페인 혁명 운동이 스탈린의 통제를 벗어나 POUM(마르크스주의적 통일 노동자당) 쪽으로, 그리하여 POUM과 친한 트로츠키 쪽으로 설득될 위험이 감지됐다.

당시 스탈린이 지배하고 있던 코민테른(국제공산당)은 그럴 바에야 차라리 프랑코 장군의 파시스트들이 정권을 잡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이런 사실들은 소련 트로츠키주의자이자 역사가 바딤 Z 로고빈(1937~98)의 저작(1937: *Stalin's Year of Terror*, Michigan, 1998)에 의해 훨씬 폭넓게 공개됐다.(이하의 서술은 이 저작에 크게 의존했다.)

기밀해제 문서들은 스탈린의 권력을 위협한 세력이 스페인 혁명가들 외에도 실재했음을 보여 준다. 특히 러시아 국내에 말이다. 그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첫째, 중년이 된 볼셰비키 선임 당원들. 이들은 20대와 30대에 1917년 10월 혁명을 체현하면서 볼셰비키당에 입당했던 사람들이다. 그동안 이들은 하는 수 없이 스탈린 통치를 감내하면서도, 급속한 경제 성장에 고무돼 점점 스탈린 공포 통치에 대한 불만을 키워 왔다.

둘째, 군부 내의 트로츠키 지지자들. 이들은 1918~24년 트로츠키가 적군 총사령관이던 때 그 휘하에서 내전을 수행했던 야전 지휘관들이다. 게다가 군대 사병들은 여전히 농민 출신이므로 이들은 농민의 불만을 표현하고 있었다.

당시 스탈린의 보안경찰인 내무인민위원부가 보기에, 트로츠키를 지지하는 지휘관들이 농민 사병들의 지지를 받아 군사 반란을 일으킬지도 모를 일이었다.

스탈린은 트로츠키를 꺾기소하면서 나치의 보안경찰인 게슈타포와 협력했다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웠다. 이는 트로츠키의 사상이 법정에서 공개적으



1928년 반혁명으로 1917년 10월 혁명의 성과를 모두 뒤엎고 국가자본주의의 길을 놓은 이오시프 스탈린(앞 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과 지지자들.

로 토론되길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이는 한국의 공안검사들이 북한과 아무 관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에 비판적인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을 보안법으로 기소할 때도 법정에서 정치적 논쟁은 회피하는 것과 비슷하다.)

스탈린의 보안경찰은 피의자들을 트로츠키의 공범이라는 누명을 씌워 기소했는데, 그 가운데 진짜 트로츠키 지지자들은 법정에는 세우지 않았다. 그 이유는, 트로츠키주의자들이 고문에도 불구하고 투항하지 않았으므로 만일 그들을 법정에 세운다면 그들이 재판을 이용해 트로츠키주의 사상을 선전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당시에 단지 공산당들만이 모스크바 재판이 진실에 근거했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개혁주의자들, 가령 영국의 친노동당계 신문 〈업저버〉나 웹 부부(夫婦)도 모스크바 재판을 ‘진실’된 것이라고 말했다.

스탈린 정권의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이후의 전반적인 정세는 혁명가들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았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의 상황은 혁명 운동의 패배로 끝나며 혁명가들의 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마침내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났고, 소련이 참전했다. 빅토르 세르주의

1939년작 소설 제목대로 “세기의 한밤중”이었다. 트로츠키는 스탈린이 보낸 길러에 의해 살해당했다(1940년).

로고빈에게 빚지지 않고도 다른 기밀해제 소련 문서에 따르면, 스탈린은 중국 혁명 승리 직후에도 대규모 유혈 숙청을 계획했다. 1953년 초에 그가 죽는 바람에 미수로 그쳤지만 말이다.

옛 소련과 북한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용어를 사용한 점이 실제 현실을 가려서는 안 된다. 엥겔스는 마르크스를 위한 조사(弔辭)에서 인간 삶의 물질적 실재가 “이데올로기의 과잉 성장에 의해 감춰졌다”고 지적했다. 스탈린이나 김일성, 그 밖의 북한 지배자들은 이데올로기에 먼저 좌우되지 않았다. 그들은 제국주의나 시장 자본주의 국가 지배자들과 꼭 마찬가지로 물질적 고려를 우선해서 행동했다.

스탈린 체제의 등장

스탈린 체제의 등장은 러시아 혁명이 부딪혔던 한계에서 비롯했다. 러시아 10월혁명은 국제 혁명의 성공을 기대하며 착수된 러시아 노동계급(소비에트로 조직된)의 행동이었다.

그러나 국제 혁명들은 유럽 혁명가들의 미숙함으로 잇달아 패배했다. 특히, 1923년 10월 독일 혁명의 패배가

러시아 혁명의 운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엄청난 (군사적·경제적) 압력이 러시아에 가해졌다. 세계 자본주의의 압력에 부딪혀 생존을 위해 더욱더 착취적·억압적이 되는 개별 대기업(가령 요즘 현대중공업)의 행태를 봐도 이 압력의 존재와 효과를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자본주의적 단위인 소련도 더욱더 착취적·억압적이 돼야 했다.

1928~29년이 임계점이었다. 1917년의 성과는 일소됐다. 이제 노동자 권력의 존재는커녕 노동자 권리도 파괴됐다.

엄청난 속도의 공업화가 추진됐고, 농민은 국영 집단농장에 강제로 수용돼 착취당했다.

서구가 한 세기에 걸쳐 수백만 민중의 삶을 망가뜨리며 이룩한 공업화를 러시아는 겨우 20년에 걸쳐 이룩했으니 민중의 희생의 규모가 어땠겠는가. 그 잔인성은 어땠겠는가.

이는 실로 반혁명이었다! 국가자본주의로 전환되는 역사적 순간이었다.

이제 러시아는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게 됐다. 러시아 민족이 소련 내 소수민족들은 물론 소련 밖 동유럽의 민족들도 지배하면서 한 블록을 이뤘고, 미국이 이끄는 서방 블록과 경쟁하게 됐다.

물론 소련이 표방한 이데올로기는 국가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였고, ‘마르크스·레닌주의’였다. 사회주의는 이데올로기였을 뿐, 실제 현실은 전면적(관료적) 국가자본주의였다.

스탈린주의의 이데올로기와 그 체제를 구별해야 한다. 전자는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이고, 후자는 극도로 억압적인 착취 체제였다. 체제로서 스탈린주의란 1920년대 말부터 1991년 붕괴 때까지 옛 소련 사회를 지배한 체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물론 이 체제는

중국과 북한에 잔존하고 있다.

해방의 이데올로기인 마르크스와 레닌의 사상을 표방하면서도(물론 국가 종교처럼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는 억압적이고 착취적인 체제를 지킨다는 모순 때문에, 소련 블록 밖에서 해방 운동에 헌신하는 사람들(예컨대 자민통계)과 소련 블록 소속 국가 관료는 달랐다. 전자는 천대받는 민중의 옹호자를 자임하지만, 후자는 민중을 천대하고 억압하는 압제자이다.

이는 냉혹하고 잔인하게도 이북형제를 죽인 김정은과 자민통계 활동가들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스탈린주의의 모순

제2차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된 소련은 미국·영국과 협상해서 동유럽을 얻어 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30년간 소련은 옛 식민지 세계에서 동맹들을 많이 얻었다. 그 시기는 중국 혁명 승리(1949)와 쿠바 혁명 승리(1958), 베트남 전쟁(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또는 반미저항전쟁 승리, 1975), 니카라과 혁명 승리, 이란 혁명 승리 등 제3세계 민족해방 운동 성공의 시기였다.

다른 한편, 스탈린주의의 위기도 이 시기에 시작됐다. 1956년 헝가리 혁명으로 스탈린주의 체제의 신뢰성이 크게 실추됐다. 이로 말미암아 서구의 수많은 공산당원들이 당을 탈당하고 뉴레프트를 표방하기 시작했다.

1968년 체코 ‘프라하의 봄’과 1980~81년 폴란드 연대노조가 이끈 준(準)혁명 상황도 스탈린주의의 신뢰도를 실추시켰다.

‘1968년’ 운동 과정(1975년까지 지속)에서 보여 준 서구 공산당들의 궤퇴한 모습도 여기에 한몫했다.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승승장구와 서구 공산당들의 궤퇴 퇴분



스탈린이 보낸 자객에게 습격받고 사경을 헤매고 있는 트로츠키.



스탈린주의의 신뢰성을 추락시킨 1968년 '프라하의 봄'

스탈린주의의 이데올로기의 좌파적 버전인 마오쩌둥주의가 많은 지지를 얻었다. 뉴레프트의 일부(특히 미국과 남부 유럽의 뉴레프트)도 마오쩌둥주의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직후 베트남과 캄보디아 간의 전쟁으로, 또 (캄보디아) 폴 포트 체제의 잔학상으로 마오쩌둥주의도 급속히 불신받았다.

결정적으로 1968운동이 1970년대 후반에 패배로 끝났다. 스탈린주의의 다양한 버전들도 사기 저하하고 우경화했다. 유러코뮤니즘(서방식 공산당)이 등장했고 스탈린주의의 이데올로기는 결정적으로 약화됐다.

그래서 1979년 니카라과 혁명과 이란 혁명은 스탈린주의나 마오쩌둥주의 이데올로기에 이끌리지 않았다.

1980년대부터는, 스탈린주의에 환멸을 느낀 좌파 출신자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받아들이거나 주창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는 서구의 경우 운동 패배와 침체의 시기였다.(한국, 남아공, 브라질 등 신흥공업국은 달랐다.)

1980년대 전반부는 미소간 냉전 재격화의 시기였다(“신냉전”).

1980년대 중엽 소련 경제 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악화됐다. 소련의 선제적 유화 조치로서 1987년 미소간 긴장 완화가 시작됐다.

그러나 1989년/91년 각각 동유럽과 소련의 스탈린주의의 체제가 와해됐다. 국가자본주의에서 시장자본주의로의 긴 전환 과정이 시작됐다.

스탈린주의의 이데올로기도 거의 사멸하게 됐다. 세계 공산당들의 보편적인 우경화가 시작됐다. 남아공, 한국 등에서조차 그랬다.

한국의 스탈린주의는 1980년대까지는 혁명적이었고, 1990년대에는 중간주의적(혁명적 입장과 개혁주의적 입장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동요하는 것)이었고, 2000년 이후로는 점점 개혁주의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좌파적 개혁주의와 흡사해도 북한에 대한 입장 때문에 진화한 스탈린주의로 취급해야 적절하게 분석할 수 있다.

이런 진화는 단순한 이데올로기 변화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물질적 토대의 특이성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스탈린주의의 사회적 기반은 세 계급

에 걸쳐 있다: 노동계급과 북한 지배계급과 남한 일부 지배자들이 그것이다. 1934년 이후 인민전선(한중의 반동 모리배를 제외하고 계급을 초월한 국민연합)의 전통 때문에 지배계급의 일부(2000년 이후로는 임동원과 정세현, 심지어 정주영도)까지 포섭했던 것이다.

이런 다계급 기반 지향성이나, 계급을 초월하기는 자연히 민중주의의 경향을 띠게 되는 걸로 나타나게 된다. 계급투쟁이 핵심 과제가 아니라 통일과 남북 화해협력의 최우선 과제가 되고, 민주당 지지/동맹 노선을 추구하고, 스탈린주의의 사상은 개혁주의적 논리의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사상과 전략은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입맛에 맞으므로 그들의 일부에게 받아들여지게 된다.

스탈린주의의 핵심 이데올로기는(국제 사회주의가 아니라) 일국 사회주의이다. ‘우리식 사회주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등이 그 사례다. 일국 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진화한 결과는 좌파적 민족주의이다. 민족주의의 때문에도 스탈린주의의 사상은 개혁주의적 논리의 영향을 받는다.

한편 북한 지배계급에 두고 있는 기반 때문에 북핵, 세습, 북한 인권(억압), 탈북민, 성소수자 등의 문제들에 대한 태도는 아주 나쁘다.

그리고 스탈린주의의 사상은 당이 운동을 대표한다는 나쁜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자민통계 활동가들은 자기들 자신이 운동 그 자체라는 생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다른 경향의 활동가들과 감정적으로 이반하곤 한다.

스탈린주의의 유산

이제 스탈린주의의 핵심 유산을 살펴보기로 하자. 스탈린주의의 유산은 사회주의의 의미를 전복해 버렸다. 그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국유화 또는 국영 경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철학의 빈곤》에서 프루동이 자본주의를 사유재산 제도로, 또 사회주의를 국유화로 정의한다고 비판했다.

엥겔스도 1877년 비스마르크의 주요 산업 국유화를 “사이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그런 식이라면 담배 산업을 국유화한

나폴레옹과 메테르니히를 사회주의의 창시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소유(소유관계)가 형식적인 법률적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가령 서양의 고대 사회, 중세 사회, 근대 사회의 사적 소유는 형식이 모두 같아도 그 내용, 특히 그 생산관계는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로 서로 다르다.

다른 사례는 고대 중동 제국(帝國)들이다. 거기서 주요 생산수단(토지)은 모두 국유화돼 있었지만, 그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 계급 사회였다.

또 다른 사례는 가톨릭 교회의 소유관계다. 중세 이래로 사적 소유가 아니라 공적 소유였지만(가령 사제의 상속권이 없다), 그 생산관계는 중세에는 봉건적이었고, 오늘날에는 자본주의적이다(가령 바티칸은 세계 금융시장의 큰손이다).

이렇게 형식과 내용은 반드시 일대일(一對一) 대응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유 자본주의도 있을 수 있고 국유 자본주의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마르크스는 사회주의를 국유화나 국영 경제로 정의하지 않고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으로 정의했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자신의 행위다.”

동유럽과 북한, 중국 등지에서 노동계급의 자력해방은 없었다. 동유럽과 북한은 소련 군대에 의해 사회가 전면 재편됐고, 중국에선 지식인 유격대원들이 농민의 지지로 집권한 후 사회를 전면 재편했다.

특히, 제국주의 국가의 현지 대리인 구실이나 하던 허약한 기존 국가 대신에, 강력한 국가 관료가 통제하는 국가자본주의 국가가 들어서서 자본 축적을 관장했다.

농촌에서 지주제도가 폐지됐지만, 그 대신에 국가가 집단농장을 세워서 집단으로 농민을 착취했다.

노동계급의 자체 활동 없이도 노동자 국가나 사회주의 사회가 가능하면, 사회주의 운동에 노동계급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노동계급이 중요하지 않으면 마르크스주의도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된다. 마르크스주의와 노동계급 투쟁은 역사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정치가 마치 하찮은 존재 취급을 받는 건 대 부분(전적으로 그런 건 아닐 게다) 스탈린주의의 유산과 그에 대한 좌파의 부적절한 대처 때문이다.(《노동자 연대》 신문은 옛 소련 블록 소속 국가들이 소위 ‘사회주의 국가’이기는커녕 관료적 국가자본주의라고 주장해 왔다.)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게 만드는 데서 더 나아가 모든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민주적이며 진정으로 평등한 사회를 염원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권력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핑계는 이제 그만! 난민들을 당장 환영하라!”

스페인 바르셀로나

“난민 환영”을 외치며 수십만 명이 행진하다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맞서 단결하자’ 활동가이자 스페인의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인 데이비드 카발라가 현지에서 고무적인 소식을 전한다.

2월 18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는 정부한테 더 많은 난민을 수용하라고 요구하며 30만 명이 행진했다.

이 시위는 규모가 엄청났고 정말이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맨 앞에서 메인 현수막을 들고 대열을 이끈 사람들 중에는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맞서 단결하자’에서 활동하는 흑인과 무슬림들이 있었다.

바르셀로나의 많은 노점상들은 세네갈이나 감비아 등 아프리카 나라 출신의 이주주민인데, 그들도 최근 조직을 결성해서 행진에 참가했다. 흑표범당 출신의 활동가도 그들과 함께 행진했다.

바르셀로나 노점상들은 바르셀로나 시(市) 정부의 탄압에 맞서려고 조직을 결성했다. 그들은 보수당이 시 정부를 이끌던 시절에 혹독하게 탄압 받았고, [2015년 선거로] 좌파가 집권한 뒤에도 종종 탄압을 받는다.

시리아 난민과 좌파 활동가들은 아랍어로 연대를 뜻하는 단어 “타다몬”이라 쓰여진 현수막을 들고 행진했다. 그들은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의 퇴진을 요구하고 러시아와 서방의 폭격을 모두 반대했다.

[바르셀로나가 속한] 카탈루냐 주의 독립을 요구하는 가장 큰 운동 단체 두 곳이 이날 시위에 사람들을 동원했다. 행진 대열 곳곳에서 카탈루냐 독립을 상징하는 깃발을 볼 수 있었다.

‘우리의 집은 여러분의 집이다’라는 이름의 캠페인이 벌어졌는데, 그 핵심 구호는 “우리는 난민들에게 살 곳을 주고 싶다”였다. 그리스 섬들에 고립된 난민들을 돕는 자원 활동에 나섰던 젊은 방송인들이 주축이 돼 이번 캠페인을 시작했다.

그들은 18일 시위를 지지하며 2월 11일에 “난민을 위한 대형 콘서트”를 개최했고, 카탈루냐 주요 TV 방송국들이 생방송으로 중계했다. 카탈루냐의 최고위 정치인들도 18일 시위를 지지한다며 콘서트에 참석해 VIP석에 앉았다.

TV에서는 매일 18일 시위가 광고됐다. 뉴스와 특별 프로그램뿐 아니라, 심지어 정치 풍자 프로그램에서도 거론됐다.

카탈루냐 주정부 등 카탈루냐의 독립을 지지하는 정당(중도 우파 포함)이 모두 이 시위를 지지하고 건설했다. ‘그러면 그냥 난민을 받아들이면 되잖아?’ 하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된다.

그들의 대답은 이렇다. ‘스페인 중앙정부가 우리를 막고 있고, 카탈루냐가 독립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그들은 갈수록 커지는 압력에 직면해 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카탈루냐 주 정부가 독립 찬반투표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카탈루냐 주 정부는 언젠가는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반자본주의 정당 민중연합(CUP)은 “핑계는 그만 대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들은 독립을 원한다면 지금 당장 중앙정부의 말을 거부해야지 먼 미래로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는 스페인인들이 난민을 환영한다는 것을 보여 줬다. 그러나 상층 조직들의 주도력이 강해 한계도 있었다.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더 커다란 요구는 배제하는 방식으로 조직된 것이다.

원래는 “이주민법 반대한다”는 구호가 주요 현수막 중 하나로 제작될 예정이었지만 “카탈루냐는 누구나 환영하는 땅입니다”로 바뀌었다.

행진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은 인종차별 반대 활동에 처음 참가한 사람들이었다. 그런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게 된 것은 아주 멋진 일이지만, 우리가 꾸준히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는 과제도 보여 준다.

‘파시즘과 인종차별에 맞서 단결하자’는 이번 시위의 주요 조직자의 일부로 참여했다.

이번 시위는 무슬림 혐오와 극우 세력에 맞선 활동에 대한 지지가 느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인종차별에 맞선 투쟁에서 무슬림 혐오와 극우파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쟁점이고, 우리는 그에 맞서는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542호 / 번역 김종환

현대중공업 노조 22년 만에 전면파업 돌입 노동자 해고하는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정당하다

박설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파업 현장에서

집회장 뒤편으로 날카로운 기계음이 들려 왔다. 작은 블록을 제조하는 소조립공장에서 크레인으로 철판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멀리서 봐도 희뿌연 먼지가 가득했다. 용접할 때 뿜어져 나오는 쇳가루 때문이었다.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면 매캐한 냄새도 지독했다.

“저 크레인을 운전하는 사람들도 지난해 다 분사화됐어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안전교육도 안 하고 투입시켜 여럿이 죽어나갔다가요!” 옆에 있던 노동자가 “분사화는 미친 짓”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 대의원은 자칫 대형참사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순간도 있었다고 전했다. LNG선에 들어갈 수백 톤의 가스 저장고가 크레인에서 떨어졌는데, 만약 그 아래 사람들이 있었다면 “1백 명이면 1백 명 모두 죽었을지 모른다”는 것이다.

사고의 원인은 분사화였다. 지난해 사측이 크레인 운전수·신호수·시설 정비 등을 분사화(하청화)했다.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하다 보니 최소한의 안전교육조차 없이 채용 당일 무리하게 노동자들을 업무에 투입해 사고를 부른 것이다.

반토막 임금

노동자들은 사측이 최근 올해 임금 20퍼센트 반납을 요구하고 ‘구조조정 저지 파업은 불법’이라고 몰아가는 데 불만이 많았다. 반갑게도 몇몇 노동자들은 <노동자 연대>가 발행한 리플릿과 신문을 봤다며 ‘사측의 논리 반박이 도움이 됐다’고 악수를 건넸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노동자들은 개의치 않고 집회 대열을 정비했다. 현대중공업지부 백형록 지부장은 “내일 우리는 1996년 이후 22년 만



“박근혜 정부가 자빠지는 것을 보니 힘이 막 나더라”

에 전면 파업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노동자들은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했다. “굴종을 강요하는 회사에 맞서 자신감 있게, 완강하게 파업에 나섭시다!”

노조 지도부는 파업 대열을 최대한 늘려 파업 효과를 높이자고 호소했다. 노동자들은 공장 곳곳을 돌며 동료들에게 함께하자고 외치며 순회 투쟁을 벌였다. 사측은 “불법 파업” 비난을 쏟아냈지만 노동자들은 굳건해 보였다.

집회가 끝나고 조선사업부의 노동자 일부와 함께한 뒤풀이에서, 한 대의원이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회사가 파업에 참가하면 조장 자격을 박탈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조합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르려면 잘라라, 조장수당 8만 원에 우리 코를 꿰 수 있을 줄 알았나?” 즉시 여럿이 호응했다. “그래, 어디 한 번 해보라고 해라!”

“기자 양반, 내가 17년 차인데 차 페고

포 페고 나니 임금이 (상여금 빼면) 1백 28만 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나도 받은 만큼만 일해야지, 안 되겠어.”

“작년에 고정연장수당이 없어져서 임금 50~60만 원이 깎였어요. 휴일근무도 없어져 또 많게는 80만 원이 깎였어요. 임금이 반토막 난 거라!”

한 노동자는 보수 언론의 비난이 억울하다면서 “우리가 귀족노조예요?” 하고 물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20~30대 후배들이 형님에게 한 마디 했다. “형님, 귀족하고 노조는 애초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귀족은 정몽준에게나 어울리는 말이지!”

나이가 지긋한 한 노동자는 구조조정이 업무 능력을 떨어뜨린다고 꼬집었다. “평생 바쳐 일했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니 일할 맛이 안 나요. 열심히 일해 봐야 임금 깎이고 비정규직 되고 희망 퇴직 당하는데,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그러니 작업이 부실해지고 다시 수정 작업, A/S 요구로 돌아오는 거죠.”

자신감

이튿날 다시 공장에 들어가려고 정문 앞에 섰을 때, 노조와 진보정당들, 시민단체들이 걸어 놓은 플래카드가 눈에 들어왔다. 그런데 한 칸에 익숙치 않은 명이가 보였다.

동구 의원 홍유준. 그는 새누리당 소속이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도 보였다. 이들은 “분사 사업장 탈출산 반대”를 내걸었다. 현대중공업이 분할 후 사업의 일부를 타 지역으로 옮기면 지역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다. 얼마 전 울산 시의회가 현대중공업 분할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북도지사와 군산시장이 군산 공장 폐쇄에 반대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구조조정은 시장과 사업의 축소, 인력 감축을 동반하고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문제여서, 노동자들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주들, 지방정부들 사이에 상당한 갈등과 긴장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구조조정의 정당성을 떨어뜨리고 노동자들에게 자신감을 줄 수 있다.

구조조정을 밀어붙인 박근혜 정부가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탈법적 경영 승계로 비난을 산 삼성의 이재용이 구속된 것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겐 기회로 여겨지고 있다. “박근혜가 우리 노동자들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었는데, 그 정부가 자빠지는 것을 보니 힘이 막 나더라고요.”

“이재용이 구속됐는데, 박정희 기념관 만든다고 똑같이 뇌물 갖다 바친 정몽준은 왜 안 잡아가나요? 노동자 대량 해고하고 산재로 사망하게 만든 건 범죄잖아요.”

오전 10시경, 전체 파업 대열이 다시 집회 장소로 모였다. 집회 연단에 선 한 지단장(대의원 대표)은 “현대중공업 분

할은 정몽준 아들 정기선에게 부를 승계하려고 노동자 죽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권과 자본은 구조조정을 해서 회사를 살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사와 노동자는 공동 운명체가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은 재벌 순위 9위, 사내유보금 19조 3천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사측은 분할 이후에도 고용·노동 조건은 보장할 거라고 말했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믿지 않았다. “지금 비정규직이고 정규직이고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일하는 전기전자 사업부는 이미 외주화가 70퍼센트 정도 됐어요. 기업이 분리되면 외주화가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도 임금 반납하라고 하는데, 분사 후에는 노조 조직력이 약화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격이 더 심해지지 않겠어요? 저성과자나 뭐니 하면서 퇴출(해고)도 하려 하겠죠.”

이날은 1천5백여 파업 대오가 모두 함께 공장 전역을 돌며 행진했다. 수백대의 오토바이 부대가 경적을 울리며 활력을 줬다. 일부 여성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한 것도 무척 반가웠다. 이들은 최근 대의원 선거에서 친사측 후보들을 모두 떨어뜨리고 당당히 민주파를 선출했다.

올해가 정년인 한 노동자가 함께 행진하면서 말을 건넸다. “내가 올해 정년인데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여기 나오겠어요. 근데 저 20대, 30대 후배들을 봐봐요. 정병모 집행부(민주파 집행부)가 들어선 뒤로 저 젊은 친구들이 앞장서는 것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참 많아요. 후배들이 참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 현대중공업 노조는 23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기업 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가 예정된 27일까지 일손을 놓기로 했다.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노동자 연대〉는 마르크스주의로 세계를 분석합니다.

- ▶ 투쟁하는 노동자와 노동자 연대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신문
- ▶ 차별과 억압에 맞서 대안을 제시하는 신문
- ▶ 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논쟁적인 신문
- ▶ 국제적 저항과 운동 소식을 좌파적 관점에서 전하는 신문
- ▶ 저항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신문
- ▶ 독자들이 판매자이자 기고자이고 후원자인 신문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wspaper.org**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26개 호) 5만 원, 2년(52개 호) 10만 원

신청 : 02-777-2792, 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 입금 계좌 (예금주 (주)네트미디어)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통협 301-0010-1643-71

정기구독을 신청합니다

이름	_____
전화번호	_____
이메일	_____
구독기간	☐ 1년 (26개 호) 50,000원 ☐ 2년 (52개 호) 100,000원 ☐ 2년 이상 ()년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을 찍어 보내 주세요. 담당자가 확인한 후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010-6491-2792 / ws@wspaper.org